

흔들리는 비박...제동 걸린 탄핵

비주류 “퇴진 일정 협상·탄핵 절차 동시 추진해야”

김무성 “일단 지켜보겠다”...탄핵 정족수 채울지 관심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국회의 탄핵안 의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여 왔던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이 동요하는 등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에 관해 여야 협상과 탄핵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다음달 9일 이전까지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상사국회의 소속 황영철 의원은 29일 저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된 합의에 조속히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희망하고 촉구한다”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민이 바라는 조기 퇴진 일정과 관련해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 일정이 미뤄지거나 거부돼선 안 된다”며 “헌법,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퇴진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야당이 탄핵안 처리 시점으로 제시한 다음달 2일은 “너무 촉박하다”며

“적어도 (다음달) 9일 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탄핵안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 내용과 관련 “개헌을 통한 조기퇴진 관련된 입장 정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나경원, 정병국, 김재경 등 비박계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30여 분간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김 전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의원총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종전의 강경한 탄핵 방침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늦게라도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일단 야당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여야가 기한을 정해서 한번쯤

퇴진 일시를 얘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 이후, 속전속결로 오는 2일 탄핵안 의결 방침을 세웠던 야권의 방향 전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탄핵 일정을 9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탄핵안을 의결시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꿈수에 정치권이 달려든 것이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양심적인 선택을 해줄 것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조특위, 조인근 전 비서관 증인 채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추가 논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7일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추가 채택했다.

또 다음달 6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중준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김신 사장을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1차 청문회 증인은 이재용·정몽구·최태원·구본무·신동민·김승연·조양호·손경식 등 8대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및 이승철 부회장에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 박원호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까지 모두 15명이다.

2차 청문회 증인으로서는 조 전 비서관과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김종진 문체부 2차관, 송상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전대주 전 주베트남 대사, 장승호 씨가 추가됐다.

최순실·최순득·장시호·정유라·차은택·고영태·이성환 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우병우·조원동 전 수석비서관 및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기존에 채택된 증인까지 더해 모두 27명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 대해서는 3·4차 청문회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국민의당이 최순실씨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집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제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에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했었으며,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 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작용의 여지를 넓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 “국정교과서 강행시 교육부 폐지”

“대일본제국 교과서” “박정희 위한 사부곡” 맹폭

야권은 29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교육부에 맹폭을 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철거를 해야 할 만큼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교과서인지 대일본제국의 교과서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할 경우 교육부의 폐지는 불가피하다”면서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교육부

폐지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하고 문 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위원장을 맡은 유은혜 의원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1971년도 제2차 남북 적십자회담 사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 회담은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것인 등 기본적 사실도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결국 우리대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에게 바친 사부곡(思父曲)”이라며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발이며 역사에 대한 린치(폭력)”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누리예산 이견 좁힌 여야 “2조원, 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세법은 평행선 여전

내달 2일 처리 불투명

여야 3당과 정부는 29일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일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교육재정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규모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 방안과 야당이 주장해온 중앙정부 편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절충한 것이다.

윤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1조원씩 부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 방식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의 경우 민주당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잠정 합의한 것까지는 아니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늘릴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잡은 3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이런 방안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누리과정을 포함한 내년 예산에 대해 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범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예산안 처리의 또 다른 쟁점인 법

인세법과 소득세법 부분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조정해 23%로 인상하거나, 과표 5억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1조원 정도의 세입을 추가 확보해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아직 자체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인상 자체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